

대한민국 2014 년 인권보고서

EXECUTIVE SUMMARY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통치체제로 하는 입헌민주주의 국가이다. 7 월 보궐선거와 6 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12 년 12 월 대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진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당국은 보안 기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중요한 인권 문제들로서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죄 등의 관련 법률들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와 종전과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한 사례, 그리고 군대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가 보고되었다.

그 외의 인권 문제들로서 일부 공직자의 부패,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률의 부재, 성폭력 및 가정폭력, 아동 성매매, 인신 매매 등이 있었다. 탈북자, 소수 민족/인종,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LGBT), 에이즈 환자, 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발생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에 제약을 가한 것도 문제였다.

정부는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들을 기소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면책이 허용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제 1 절.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

a.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인

고참들의 구타와 폭행으로 4 월에 육군 이병이 사망한 사건의 수사 결과가 8 월에 발표되자 국민적인 공분이 폭발했다. 사건에 연루된 6 명의 병사는 살인죄로 기소됐으며 10 월에 법원은 이들에게 3 개월에서 45 년 사이의 징역을 선고했다.

국방부는 당해 연도 상반기 중에 군대 내에서 37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괴롭힘, 가혹행위, 군대 부적응이 주된 자살 원인이었다고 발표했다. 8 월에 병사 2 명이 군 생활 부적응과 가혹행위를 이유로 동반 자살한 사건이 국민적인 이목을 끌었다. 병영 문화를 개혁하고 인권 침해 실태를 개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8 월에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고 인권교관의 수를 250 명에서 2,000 명으로 증원했으며 2015 년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예방할 목적으로 9 월에 군 인권팀을 신설했다.

b. 실종

정치적 동기와 관련된 실종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법률상 이러한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정부 당직자가 당해 연도 중에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믿을만한 보고가 있었다.

법률은 판사 혹은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19 세 미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9 월 현재 7 건의 화학적 거세를 신청했다.

정부는 군대 내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300 건의 형사 사건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군 당국은 신문 지면을 통해 4 월 한 달에만 3,900 명 이상의 병사가 가혹행위에 연루됐다고 보고했다(제 1.a.항 참조).

교도소 및 구치소 실태

교도소 및 구치소 환경은 전반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했으며, 정부는 외부 인권감시단체의 방문을 허용했다.

시설 현황: 법무부에 따르면, 7월 31일 현재 수용자 수는 총 50,800명이며 이 중 3,025명이 여성이고 492명이 미성년자로 집계됐다. 비정부기구인 국제교도소연구센터(ICPS)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에는 36개 국영교도소, 1개 민영교도소, 11개 구치소, 3개 구치소 지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교정시설의 수용능력은 2014년 7월 현재 46,180명이었다. 교정 당국은 남녀 수용자들을 남녀 성별의 차이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별도의 유사한 시설에 수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수용자들을 내국인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유사한 시설에 수용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19세 미만)은 성인과 분리된 시설에 구금된다. 법무부 보고에 의하면, 미결수는 총 17,880명이었으며 이들은 구치소에 구금된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교도소에 수감된다. 1월부터 7월까지 교도소에서 19명이 사망했다. 16명은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3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무부 보고에 의하면, 7월말 현재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총 85건의 진정이 접수됐으며 조사를 실시한 결과 8건은 인권 침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고 67건은 허위 증거 혹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됐으며 10건은 시정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해 연도 중에 7월까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이나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는 진정이 94건 접수됐으며

그 중 15건은 각하, 39건은 조사 후 기각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40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여자교도소에는 여성 보건과 연례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특별 검사실이 운영되고 있다. 적절한 식사, 위생 상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며 수용자들에게는 식수가 공급된다.

행정: 관계 당국은 교정 기록을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고 보존 기한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30 년이 경과한 기록은 체계적으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 비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대체 판결을 의무화하는 법적 절차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벌금·사회봉사·집행유예 판결이 일상적으로 내려지고 있다.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면회가 허용되며 종교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교도소 옴부즈맨 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는 검열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혹은 인권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조사를 요청하거나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문제가 있는 상황들에 관한 신빙성을 갖춘 주장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 결과를 문서화했다. 관계 당국은 당해 연도 중에 법무부에 접수된 79 건의 진정 사건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교도관이 수용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독립적인 감시: 교도소 시설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당해 연도 중에 구금 실태에 대한 감시를 요청하지 않았다.

d.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자의적 체포와 구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준수했다. 다만,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의도된 행위를 한 자를 구금·체포·수감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국내외 비정부기구들은 금지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보법의 철폐 혹은 개정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원이 법조항의 자의적 적용을 배제하는 엄격한 해석을 통해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및 안보기관의 역할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으며 국내치안을 담당한다. 민간 정부는 경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정부는 직권남용과 부패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효과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다. 당해 연도 중에 보안 기관이 관련된 면책 조치는 보고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NIS)은 국가 안보 및 체제 전복과 관련된 범죄나 범행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국제위기그룹에서 8 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의 포괄적인 권한과

비밀주의가 부실한 감독 체계와 맞물리면서 국정원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불합리하게 확대 해석하여 수사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적시했다. 9 월에는 전 국정원장이 2012 년 대선을 앞두고 2009 년 2 월부터 2012 년 12 월까지 70 여 명의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인터넷상에서 정치적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11 월에는 탈북자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기 위해 중국 정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방법원에서 5 명의 국정원 직원들에게 12~30 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체포 절차 및 피구금자 처우

현행법인 경우, 또는 영장 발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속한 체포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구금·압수·수색은 법에 의해 영장이 요구된다. 이 경우 담당 검사 또는 경찰관은 피의자 체포 직후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당국은 자진 출두한 자를 경찰서에서 6 시간 이상 심문할 수 없다. 당국은 구속 후 20 일 이내에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구금을 10 일 연장할 수 있다.

보석 제도가 있다. 인권변호사들에 따르면, 당국은 중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도주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 혹은 주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 심문 등의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권이 거부되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변호인 접견에는 제한이 없지만 변호인이 심문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누설하여 심문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호인의 심문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의 변호인 선임권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 기간 중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공판 전 기간 중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구금자는 정부에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간첩으로 의심되는 탈북자는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9 월에는 지방법원에서 법적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영장 없이 135 일간 구금했다는 이유로 탈북자 간첩 용의자를 석방했다.

구금 기간 중 가족 면회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랐다.

자의적 체포: 2013 년도의 경우 100 명 이상을 기소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법무부는 당해 연도 중에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7 건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이 중 1 명은 유죄가 확정됐으며 6 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9 월 현재 18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고 적시했다.

8 월에는 대법원에서 2010 년 12 월부터 2011 년 12 월까지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리트윗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글이 풍자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8 월에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외 6 명의 형량을 9 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면: 정부는 1 월에 5,925 명이 사면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한 시민단체는 대통령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 중인 여호와의 증인 신자 100 여 명의 형기를 1~2 개월 감형했다고 밝혔다.

e.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률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실제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했다. 과거에 국제 인권단체들은 고위 판사들이 하급 판사들의 독립성을 제한했으며 사법부에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 절차

헌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사법부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시행하고 있다. 법률은 무죄 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필요한 경우 통역을 이용하고 구속 이유를 즉시 통보받을 권리,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항소권, 소급 금지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피의자는 구속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1 심 재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재판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판사가 방청인이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배심원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의 경우 배심원도 판사와의 동의와 협의를 거쳐 평결을 내릴 수 있다. 배심원 재판은 반드시 피고의 사전 신청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고 수입료를 지급해야 한다. 판사는 검찰과 피고 양측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대동하고 법정에 출석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유죄라고 진술하거나 자백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며 항고권을 갖는다. 또한, 피고인은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관련 증거에 접근할 수 있다.

정치범

법무부는 현재 단지 정치적인 신념만을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양심적 병역거부, 쟁의행위를 이유로 체포된 시민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법에 따라 모든 성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병역 기피자는 법률상 구분이 되지 않는다. 병역 의무 위반자 혹은 거부자는 최고 3 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7 월 현재 건강이나 신체 장애 혹은 그 밖의 사유로 4,050 명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9 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680 명이 수감 중이라고 보고했다. 비정부기구인 워치타워는 9 월 현재 여호와의 증인 신자 30,576 명이 수감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 월 현재 336 명이 병역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고 18 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고했다. 당해 연도 중에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 혹은 윤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숫자는 증가했다. 한 비정부기구는 캐나다, 프랑스, 호주 정부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했다고 보고했으며 1 월 중에 호주에서 그러한 사례가 1 건 기록됐다.

민사 사법 절차 및 구제 제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사 절차가 갖춰져 있었으며, 국내 법원 명령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시민은 법원에 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잘못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 사법적 구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f.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에 대한 자의적 침해

위와 같은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준수했다. 도청방지법은 정부가 범죄수사의 경우 최장 2 개월, 국가안보 관련 사안의 경우 최장 4 개월간 전화, 우편 및 기타 통신 수단을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을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7 월 현재 법원은 총 109 건의 감청을 허가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받은 자로 하여금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3 개월 간격으로 주요활동사항, 인적 사항, 직업, 재산 상태를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월에 비정부기구인 아시아인권위는 보안관찰법이 이동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며 규정이 모호하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보법은 가정 내 북한 라디오 청취 또는 북한 서적을 읽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본 금지규정의 집행 사례는 여전히 드물고, 가정에서 북한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합법이다.

제 2 절. 시민적 자유의 존중

a. 표현 및 언론의 자유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헌법 제 21 조 제 4 항, 형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에 제약을 가했다.

표현의 자유: 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국가보안법에 입각하여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당해 연도 중에도 북한을 고무 혹은 찬양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8 월에는 북한을 추종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수백 건 게시한 중국인 유학생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제 추방됐다. 통일부는 9 월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 북한 인공기를 경기장 내에 반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정치인을 비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당국에서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장의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언론의 자유: 독립적인 언론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을 표현하지만 엄격한 명예훼손 법률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가 제한됐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공익에 부합하고 사실을 적시한 표현을 겨냥한 명예훼손 소송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10 월에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여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기소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7 년 이하의 징역이나 5 천만 원(47,913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9 월에는 경찰이 산케이신문의 온라인 기사를 번역한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9 월 현재 1,274 명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 중 121 명이 징역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3 년도의 경우에는 그 수가 58 명이었다.

검열 혹은 내용 제한: 여성가족부는 대중가요의 가사를 심의할 수 있으며 유해하다고 판정된 경우 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는 방송과 인터넷 통신의 윤리 규정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방통위가 정부나 거대

기업에 비판적인 내용을 삭제하는 사실상의 검열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9월에 검찰청은 인터넷에서 허위 정보를 감시하고 발견 즉시 삭제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5명과 수사관으로 구성된 팀을 설치했다. 10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사이버 사찰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국내 최대의 모바일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의 사용자가 불과 1주일 사이에 4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명예훼손죄/국가보안법: 법률은 명예훼손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형법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뉴스 보도를 경직시킬 가능성이 있다. 법률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8월에 검찰은 대통령 일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야당 의원인 박지원 의원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7월 현재 11,623명이 명예훼손으로 입건됐으며 그 중 166명이 기소되고 1,386은 약식기소됐다고 보고했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역시 처벌을 받는다.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다.

인터넷의 자유

정부는 인터넷 접근을 일부 제한했으며 법률에 따른 포괄적인 권한을 근거로 e 메일과 인터넷 대화방을 감시했다.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며 널리 보급되어 있다.

방통위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혹은 게시판 같은 SNS 사이트에 게시된 글에 불법·유해 정보로 규정된 콘텐츠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금지된 게시물이 발견된 경우 정부는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다. 금지된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계정이 차단된다.

정부는 또한 폭력 사이트, 외설 사이트, 도박 사이트, 기타 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장기·식품·의약품 불법 거래, 지적재산권 침해, 자살 모의·조장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북한 웹사이트와 북한 유튜브 채널 및 트위터 계정으로의 직접 접근을 계속 차단하고 있다.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지만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그러한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는 국보법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된다.

당해 연도 상반기 중에 방통위는 북한 사이버 공작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페이스북 및 트위터 계정 750 개에 게시된 북한 정권과 주체사상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차단했다. 국회에 의하면, 국방부는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37,130건의 친북 게시물을 적발하여 삭제했다.

학문의 자유 및 문화 행사

정부가 학문의 자유나 문화 행사를 구체적인 표적으로 삼아 제한한 사례는 없었다.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공공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금지되며 정치 집회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시위를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동 법에 입각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최측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았거나 과거 폭력 시위 경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일부 시위는 금지했다고 알려져 있다. 2013 년에 139,812 건의 집회가 신고됐으며 경찰은 그 중 203 건을 불허했다. 세카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집회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되어 평화적 시위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형법 제 314 조 업무방해죄 역시 평화로운 집회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엠네스티인터내셔널은 8 월 현재 222 명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이는 2013 년 동기의 156 명보다 늘어난 수치라고 보고했다. 12 월에 서울서부지법은 2013 년 12 월에 22 일간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지도부 4 명에게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물리력이나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단체들의 활동은 자유로웠다.

6 월에 지방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고 교사를 노조원으로 계속 가입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법내 노조 지위를 박탈한 정부의 조치를 인정했다. 국제노동기구는 고용노동부가 집회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규탄했으며, 비판론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정부 입장에 반하는 교육 정책을 지지하는 전교조를 와해시킬 목적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제 7.a 항 참조).

c. 종교의 자유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www.state.gov/religiousfreedomreport/) 참조.

d. 이동의 자유, 국내 유민, 난민 보호, 무국적자

국내 이동의 자유, 외국여행, 이민, 송환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및 기타 인도주의 기구들과 협력하여 국내 실향민, 난민, 복귀 난민,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 기타 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국외 여행: 방북을 원하는 모든 시민은 사전에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북 희망자는 정치적 의도가 없으며 북한을 찬양하거나 한국 정부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외교부는 2년 이상의 징역이 확정된 자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에게는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난민 보호

망명에 대한 접근성: 망명 허용 또는 난민 지위 부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에게 별도의 법률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난민 또는 망명 통계에 탈북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정부는 탈북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일상적으로 망명을 허용하거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2013년 6월에 난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무부 산하에 난민과를 신설했다. 정부는 출입국항에 난민인정 신청 창구를 설치하여 난민신청자가 입국 시에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강제 송환이 금지된다. 난민신청자는 정부를 상대로 통역과 법률적 조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취업을 허가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년을 기다려야 했다. 2013년에 20억 7천만 원(197만 달러)이었던 난민 지원 예산은 25억 원(240만 달러)으로 증액됐다.

난민 신청 건수는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7월까지 1,300건의 난민인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그 중 39명이 인정 결정을 받았고 1,122명에게는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334명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체류가 허가됐다. 신청에서 심사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5개월이다.

기초생활보장지원: 정부는 법률에 의해 한국 국적이 부여되는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정책을 전통적으로 시행해왔다. 정부는 당해 연도 상반기 동안 탈북자 730여 명의 재정착을 지원했으며, 한국전 종전 이래로 모두 합쳐 26,800명이 약간 넘는 탈북자가 한국에 재정착했다. 탈북자들은 문화적·사회적 차이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당수는 사회적 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2014년에 탈북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상당수가 차별과 편견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2등 시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임대아파트 지원,

중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보조, 의료 지원, 창업 자금, 취업 알선 등 최근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전국에 다수의 하나센터를 운영하면서 탈북자를 대상으로 지역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 적응을 뒷받침하고 있다.

임시 보호: 정부 지침에 의거하여 대량 난민이 발생한 경우 임시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난민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취급 혹은 형벌로 인해 생명이나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자에게는 대체 보호 수단으로서 갱신이 가능한 단기 체류 허가를 발급하고 있다. 1월부터 7월까지 정부는 난민 자격을 만족시키지 못한 334 명에게 인도주의적 임시 보호 조치를 취했다.

제 3 절.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권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19 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보통선거권을 기초로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이 권리를 행사했다.

선거 및 정치 참여

최근 선거: 7 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6 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12 년 대선과 총선은 대체로 자유롭고 공정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8 월에 국방부는 수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 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인터넷상에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7,100 건 이상 게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군 형법 제 94 조를 위반한 혐의로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하여 21 명의 관련자를 기소했다. 9 월에 서울중앙법원은 2012 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로 하여금 주요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미디어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12 년에 위헌 판결이 났지만 공직선거법은 여전히 선거 관련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실명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과 정치 참여: 12 월에 헌법재판소는 친북 성향을 이유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통진당의 친북 성향을 이유로 2013 년 11 월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 결정은 1948 년 헌법이 제정된 이래 법원이나 정부의 명령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또한,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북한의 사상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통진당 당원들을 입건했다.

여성과 소수자의 참여: 총선에서 각 정당 비례대표(총 의석수 54 석) 후보의 절반은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할당되어야 하며 245 개 지역구에 대한 각 정당 후보의 30 퍼센트는 여성을 공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통령이 여성이었고 총 300 개 의석 중 49 석이 여성 의원이었다. 16 개 상임위원회 중 2 개 위원회의 위원장이 여성이었다. 대법관 12 인 중 2 인, 장관 17 인 중 1 인이 여성이었다.

선거에서 남녀 유권자의 투표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2012 년 대선의 경우 남성 유권자의 투표율은 74.8 퍼센트였으며 여성 유권자의 투표율은 76.4 퍼센트였다. 같은 해에 실시된 총선에서는 남성과 여성 유권자의 투표율이 각각 55.7 퍼센트와 53.1 퍼센트였다. 2014 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남녀 유권자의 투표율은 모두 57.2 퍼센트였다.

유일한 소수민족 출신 국회의원인 이자스민은 필리핀에서 출생했으며 귀화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국회에 진출했다.

제 4 절. 부패 및 정부의 투명성 부족

공직자 부정을 형법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정부는 관련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 일부 공직자의 뇌물 수수 및 정치 개입 사례가 보고되었다.

부패: 정부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감사원과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재산 변동을 추적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몇몇 정부 부처가 공직자 부패를 단속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부패 행위에 관한 고충 신고 접수와 처리를 관장한다. 고위 공직자의 부정과 관련된 사건들은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기구들은 충분한 자원을 바탕으로 실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됐으며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9 월에 여야 현직 의원 3 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 억 6 천만 원(152,000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김재윤 새정연 의원은 직업학교로부터 약 5,300 만 원(50,500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장남의 집에 8 억 3,400 만 원(794,000 달러)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은닉하고 자신이 근무했던 업체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 억 2,000 만 원(114,000 달러)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산 공개: 선출직을 포함하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 형성 과정을 포함하여 본인의 재산을 등록하고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

일반 대중의 정보 접근: 한국에는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동등하게 정보 열람을 허용했다.

제 5 절.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권 침해 의혹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국내외 각종 인권단체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제약 없이 활동했으며,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인권단체의 의견에 협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무투마 루티에르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한국을 방문하여 10월 6일에 1주일간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 조사를 마무리했다.

정부 인권기구: 인권 보호와 신장을 목적으로 독립 기관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행권이 없으며 결정 사항 역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사항을 조사하고 정책을 권고하며 일선 공직자들을 교육하고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청와대에 종속되어 있고 인력이 부족하며 북한 문제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해 연도 중에 접수된 진정은 거의 모두 기각 혹은 각하됐으며 7월 31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5,126건의 진정이 접수됐으며 4,787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국가보안법 혹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옴부즈맨 업무는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청와대, 국회, 각부 부처 등 각급 정부 기관들과 협조하고 있다. 권익위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진정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 6 절.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법률은 인종,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언어나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은 금지되지 않고 있다. 동법은 이행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종차별, 임신부에 대한 고용차별,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2013년 2월에 국회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동성애자와 임신부를 보호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보수 종교 단체들의 극렬한 로비로 인해 철회됐다.

여성

강간 및 가정폭력: 법률은 강간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 강간을 불법으로 규정한 구체적인 법령은 없지만, 대법원은 2013년 5월에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집단 범행인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에서 무기형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집단 범행인 경우에는 형량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당해 연도 중에 정부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섰다.

관련 법률은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이 가해자를 상대로 최장 6개월 동안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명령은 최장 2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약 6,7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임시보호명령에 불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19,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기소유에 처분을 내리거나 교정 치료 및 상담을 명할 수 있다. 법률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이 즉시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경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위험이 있고 즉각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률은 직권에 의해, 혹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본 명령에 의해 가해자에게 주거 퇴거 혹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통신 장비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당해 연도 중에 정부는 중앙 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경각심을 높일 목적으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했다. 2013년 9월에 정부는 폭력예방교육부를 신설했다.

법무부는 7월까지 총 27,656건의 강간,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됐다고 보고했다. 당국은 16,095건의 성폭력 신고 사건에 대해 1,468명의 가해자를 구속했다. 당국은 11,561건의 가정폭력 신고 사건에 대해 228명의 가해자를 구속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의 병원을 대상으로 33개 통합지원센터에 재원을 지원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담, 의료 지원, 사건 조사,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96개 성폭력상담센터에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76개 상담센터를 포함할 경우 전국에 총 172개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상담센터는 피해자들에게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지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8월 현재 172개 시설들 중 23곳이 장애인 전용이었다. 8월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25개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 중 7 곳은 장애인, 2 곳은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시설이었다.

정부는 10 세 이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2 곳을 당해 연도 중에 새로 건립했으며 2013년에는 3 곳을 설치했다. 정부는 외국인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27 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피해자에게 상담, 취업,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 194 곳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할례(FGM/C): 여성할례와 관련된 특정 법률은 없다. 여성할례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성희롱: 관련 법률은 회사와 기관들이 성희롱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고, 정부는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 사업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1 천만 원(9,500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형사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약 16,000 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한 연간 계획과 평가 등급을 매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당해 연도 중에 여성가족부는 연간 계획을 기초로 불량한 평가 등급을 받은 174 개 기관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9월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희롱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성희롱 대처 요령을 수록한 가이드북을 배포했다.

성희롱 주장이 제기된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성희롱 교육이 광범위하게 실시됐다. 공공기관인 경우 행정 처분도 가능하다.

출산권: 법률은 부부와 개인이 자녀의 수와 터울 그리고 출산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을 차별과 강압, 폭력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정보와 수단을 제공받으며 생식 건강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숙련된 분만 보조 인력, 출산 전 산모 보호, 필수적인 출산.산후 보호 등 피임과 모성 보건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다.

차별: 여성은 헌법에 의해 남성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부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을 처벌하는 법률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법률은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8월에 발간된 OECD 보고서에 의하면 2012 년도의 경우 한국의 남녀간 급여 차이는 37.4 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법은 여성이 호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아내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혼 후에도 여성이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양육권 소송에서는 여성이 양육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재혼한 여성이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6월에 정부는

직장 내에서 남녀 평등을 확대하고 여성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최초의 양성평등 민관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2013년 6월에 정부는 공공·민간·비영리 부문의 여성 중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여성 인재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4,374명의 여성이 배출됐다.

법률은 고용과 승진에 있어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업을 5백만 원(4,76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남녀 차별과 관련된 47건의 진정이 접수됐으며 고용에 관한 진정이 20건,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차별에 관한 진정이 11건, 시설 이용에 관한 진정이 9건, 기타 진정이 7건이었다.

여성을 대상으로 고용 지원과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40곳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동종 사업군 평균의 6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채용 계획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달청은 물품 입찰 적격 심사 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하위직 공무원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의 기업에서 여성 관리자의 수가 다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2013년에 경총은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의 공공 및 민간 기관에 재직하는 관리직 여성의 비율이 16.3퍼센트라고 보고했다.

여성 근로자 중 상당수가 남성에 비해 저임금, 저숙련 계약직에 집중되는 경향 때문에 남녀간 임금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아동

출생신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생 시점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여야 한다. 관계 당국은 부모의 국적이 불분명하거나 태아가 무국적자인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구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아동 학대: 정부는 1월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을 제정했다. 신설된 법률은 아동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반복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량을 5년에서 무기형으로 늘렸으며 사망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를 금지시켰다. 이 법은 2013년에 계모가 의붓딸을 구타하여 살해한 두건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2013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부에 전년 대비 6.1퍼센트 증가한 총 6,796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980건은 재발 사건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피해자를 치료하고 보호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가정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당해 연도 중에 7개 시설에서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를 제공했다.

조혼 및 강제결혼: 법률상의 혼인적령은 남녀 모두 18세이다.

여성할례(FGM/C): 여성할례와 관련된 특정 법률은 없다. 여성할례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아동 성착취: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은 13세이다.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위계·위력에 의해 성관계를 맺는 것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 청소년을 중심으로 십대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 강간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며, 13~19세 미성년자 강간죄의 최저 형량은 징역 5년이다. 그 외 처벌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등이 있다. 또한, 법원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다. 7월 현재 2,247건의 아동 성폭력 범죄가 신고됐다.

법률에 의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금지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아동 음란물 소지자는 2,000만원(19,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해 연도 상반기 중에 관계 당국은 99명의 피의자가 연루된 아동 음란물 사건 86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지원을 제공하는 해바라기아동센터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아동유괴: 한국은 '1980년 국제아동유괴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당사국이다. 국가별 정보에 관한 사항은 국무부 보고서(travel.state.gov/content/childabduction/english/country/south-korea.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소수의 유태계 인구는 거의 대부분이 해외 파견 근무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유대주의 행위는 보고된 바 없다.

인신매매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www.state.gov/j/tip/rls/tiprpt/) 참조.

장애인

법률은 고용, 교육, 비행기 여행 및 기타 교통수단, 건강권, 기타 공공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신체, 감각, 발달, 정신 장애를 가진 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5월에 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법률에 의해 장애인을 전담하는 검·경 특별 태스크포스가 설치되고 장애인 본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에 의하면 상당수 지자체 조례와 규칙은 여전히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건물, 정보, 통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과 사업을 시행했다. 법률은 악의적인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28,500달러)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포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장애인의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의료 시스템 도입을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정부는 장애인의 기회와 접근권을 확대할 목적으로 국립재활원뿐만 아니라 6개 지역에 재활병원들을 운영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에 의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9월에 정부는 81개 법률과 규정이 장애인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에 671건의 장애인 차별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3월에 정부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서해안 섬 일대의 염전을 대상으로 옥설과 신체적 가혹행위,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 비위생적인 노동 및 거주 환경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을 수사했다. 9월에 광주고등법원은 염전 소유주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의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신매매범 중 한 명은 18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이 유예됐다.

상시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정부 부처 3퍼센트, 공공기관 2.3~3퍼센트, 민간 기업 2.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이 면제된다. 상시 30~100인(2012년에 상시 100인 이상에서 대상 범위 확대)을 고용하는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1인당 676,000원에서 1,089,000원(645~1,040달러)의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이 고용 의무 비율의 5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0월에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는 장애인,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가 지급되는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2013년에 7,549개 기업에 3,340억 원(3억 1,800만 달러) 상당의 벌금이 부과됐다. 상시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장애인은 근무시간 조정 등 합리적인 편의를 사측에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이 이를 거부할 경우 차별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규정의 준수를 독려할 목적으로 당해 연도 중에 2회에 걸쳐 장애인 의무 고용 실적이 부진한 사업주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언론에 공표했다.

정부는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18 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 세 이상의 저소득 가구 경증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며 지자체는 수급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연금을 직접 지급한다. 일부 시민단체는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제도가 가족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친지가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 년 말 현재 등록 장애인 250 만 명 중 연금 및 수당 지급 대상자는 48,335 명이었다.

3~17 세 장애 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무료로 운영되는 특수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중증 장애 아동은 입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공·사립 학교, 어린이집, 교육시설, 교육기관은 장애 아동을 위한 설비와 기타 자원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일례로, 사립유치원은 장애 아동이 야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 교사를 배치한다.

소수 국민/인종/민족

사실상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인구 5 천 만의 한국에는 7 월을 기준으로 162 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8 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189,126 명의 외국인이 불법 체류하고 있다. 무투마 루티에르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한국을 방문하여 10 월 6 일에 1 주일간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한국 정부에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고 농업과 어업 부문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실태를 모니터링하며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소수 민족/인종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일상적으로 행해지지만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2 월에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는 곱슬머리 가발을 쓰고 얼굴을 검게 칠한 희극인 3 명이 '아프리카인'으로 분장하고 출연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8 월에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며 아프리카인들이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7 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52 건의 민족 및 인종 차별 진정 사례를 조사했다. 그 중 6 건은 당해 연도 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5 건은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해결됐으며 1 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결됐고 8 건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32 건은 조사 후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일부 시민단체는 비자 발급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언어 및/또는 특수교육 요건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일부 국가를 차별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인하여 소수 민족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여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돕기 위해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인한 폭력 행위, 차별, 기타 가혹행위

법무부는 헌법의 평등 원칙이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LGBT)에게 적용된다고 보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한 차별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은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2010 년과 2013 년 사이에 4 개 지방교육청에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하여 학교 내 차별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채택했다.

LGBT 차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거나 차별 혹은 폭력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반기에 그러한 차별행위와 관련된 진정이 8 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당해 연도 중에 LGBT 를 상대로 행해진 폭력 사건은 알려진 바 없지만 LGBT 당사자나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당했다. 6 월에는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서울과 대구에서 개최된 동성애자 문화축제를 방해했다. 5 월에 서대문구청은 퀴어문화축제 허가를 취소했다. 6 월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청의 취소 조치가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구청장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군 형법은 군대 내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LGBT 단체들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극소수 연예인들 중 하나는 그로 인해 각종 연예 관련 단체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 년에 동성 연인과 결혼한 영화감독 김조광수가 제기한 동성혼 불복 소송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HIV 및 에이즈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

일각에서는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이 심각한 사회적 차별과 부정적 인식으로 계속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법률은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이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 연예, 스포츠 혹은 기타 쇼 산업에 종사하면서 국내에 90 일 이상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의무적으로 HIV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했다.

제 7 절. 근로자의 권리

a.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법률은 근로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합법적인 쟁의권, 단체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사를 포함하여 공무원에게는 일정한 제약이 가해진다. 법률에 의해 공무원은 “노동 운동 목적의 집단 행동”이 금지된다. 노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법률은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는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법률은 근로자의 권리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복수노조 설립은 허용되지만 사측에서 복수의 협상 창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조의 선택에 의해 사측과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단일화된 교섭 창구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조원 수가 가장 많은 노조가 전체 노조원을 대표하여 교섭에 임한다.

법률은 ‘필수공익사업’ 근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쟁의권을 제한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준보다 광범위하게 규정된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 항공, 통신, 수도, 기타 공익사업, 병원 등 “공중의 일상 생활, 보건, 신체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노조에서 지정한 필수유지업무인원은 쟁의에 참여할 수 없다. 중앙·지방 정부 공무원은 일부 특정 공무원을 제외하고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조정을 거부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통상적으로 조정 기간은 일반사업의 경우 10 일로 정하고 있다. 이 기간 이후에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노조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적법하다. 법률은 직권중재 회부 이후의 쟁의행위를 금하고 있다.

또한, 법률은 “노동 분쟁”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과 관련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조건, 임금, 수당, 근로시간과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파업 역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파업 근로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실제에 있어서 법적인 보호 규정을 대체로 존중했다.

법률은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노조원을 차별한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그러한 명령을 행했다. 법률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한 보복을 금하고 있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법률의 시행을 전반적으로 보장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19,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에 추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자 복직명령을 무시하는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률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죄의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47,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관련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 또한, 법률은 노조의 합법적인 교섭 요구를 거절 혹은 무시(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19,000달러) 이하의 벌금)하거나 불법 직장폐쇄(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9,500달러) 이하의 벌금)를 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몇몇 경우들이 문제로 부각됐다. 일반적인 노조 연맹들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운영되었다. 정부는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공공연구노동조합 등 사무직 노조를 포함하는 노조 연맹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7월에 정부는 7개월간의 공백을 깨고 노사정협의회를 재개했다.

시민단체와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6월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고 교사를 노조원으로 계속 가입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법내 노조 지위를 박탈한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인정한 지방법원의 판결이 난 이후로 교육부가 전교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비난했다. 9월에 서울고등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판결 전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시민단체와 노동운동 진영은 교육부가 위헌심판 판결이 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를 공개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등 교육직 근로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로 인해 교직원 노조가 자신들의 입장을 천명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받았다. 정부 공무원과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정치운동이 금지된다.

2013년 12월에는 국영 코레일 철도노조 노조원 8,700여 명이 정부의 고속철도 자회사 설립안에 항의하여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자회사 설립이 결국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8월에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 결정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철도 운행 역사상 최장 기간인 22일 동안 지속된 이 파업을 근로조건, 급여, 수당,

근무시간과 무관한 불법 파업으로 간주했다. 또한, 법원은 파업으로 인해 코레일의 운영에 엄청난 혼란과 피해가 초래됐으며 노사 협상이 계속 진행됐더라면 회피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판단했다.

2005 년에 결성된 외국인 근로자 노동조합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7 년 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 설립 권리를 인정한 원심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여전히 진행중이다.

b. 강제노동 또는 의무 노동의 금지

법률은 모든 형태의 강제 혹은 의무 노동을 금하고 있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했으나 일부 근로자가 강제노동을 강요받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강제노동을 포함하여 인신매매법에 적용되는 형량은 다른 중범죄의 형량과 비례했다. 정부는 모든 유형의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인신매매범을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은 수천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해 부채노예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만적인 채용 관행과 임금 체불 등 강제노동의 징후를 보이는 근로 조건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1 월부터 6 월까지 정부가 실시한 조사는 착취와 가혹행위에 취약한 특성을 감안하여 40 퍼센트가 농·축산업에 집중됐다. 또한, 2013 년 당시 정부는 6,949 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처우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2013 년에 정부는 임금 지불 실태를 감독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3,048 개 사업장을 조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244 건과 임금 체불 사례 116 건을 적발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여권을 압수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2013 년에 고용노동부는 불법 여권 압수 사례 46 건을 적발하여 출입국관리국에 통보했다.

10 월에 앰네스티인터내셔널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강제노동의 징후를 보이는 상태를 포함하여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제 7.d.항 참조)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한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3 년에 실시하고 발표한 대규모 설문조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 퍼센트는 법정 근무 시간을 넘어서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답했으며 16 퍼센트는 신원 증명 서류를 압수당했다고 답했다.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www.state.gov/j/tip/rls/tiprpt/) 참조.

c. 아동 노동 금지 및 취업 최저 연령

법으로 노동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15 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중학교까지(약 15 세)는 의무교육이므로 정규직 고용을 위한 취직인허증은 거의 발급되지 않았다. 18 세 미만 청소년이 취업하려면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자는 미성년자의 시간외 근무를 제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 허가가 없는 경우 야간에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다. 윤리적 혹은 건강상의 관점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업종의 사업주는 노동법에 따라 18 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 천만 원(19,000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부는 다수의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5 월에 정부는 사업주에 대한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신고 제도를 개선하며 노동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등 미성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아동이 상업적인 성적 착취에 동원된다는 보고가 있었다(제 6 절 아동 참조).

d. 고용 혹은 직업과 관련된 차별

헌법과 법률은 인종,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차별이 발생할 경우 당해 조문을 시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장치는 결여되어 있다. 법률은 성별이나 종교 혹은 사회적 지위를 근거로 경제적, 사회적 혹은 문화적 생활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관련 법률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은 발생하고 있다. 법률은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남녀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남녀 임금 격차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제 6 절 여성 참조).

법률은 비정규직 근로자(정규직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며 정규직과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2 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 근로자(“파견 근로자”로 불린다)와 임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3 분의 1 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별적인 근로 조건에 직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 월에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러한 근로자에게도 시간외 수당이 보장된다고 보고했다.

노동계와 재계 모두 2 년 정규직 전환 규정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2 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2 년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현지 언론들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그들의 지위로 인한 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9 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 최대의 자동차업체를 상대로 거의 4 년째 진행 중인 소송에서 현대자동차에 2 년 이상 파견되어 근무하는 1 천 여 명의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2 년 이상

고용한 파견 근로자를 반드시 직접 채용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연 소득이 정규직 근로자의 60 퍼센트 수준인 994 명의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으로 약 230 억 원(2,050 만 달러)을 지급할 것을 현대자동차에 명령했다.

e. 최저 근로 조건

당해 연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 원(4.95 달러)이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 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 소득은 4 인 가족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계산됐다.

법률은 사업주에게 4 시간 근무제의 경우 30 분, 8 시간 근무제의 경우 1 시간을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은 2 주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특정한 날에 8 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특정한 주에 40 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근무제의 시행을 허용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근무시간이 40 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 근무에 해당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주휴(週休)'로도 불리는 주 1 일 휴가 규정 등의 근로 기준이 면제된다.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상시 근로자 20 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5 배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률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근로자의 주간 시간외 근무시간을 12 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기업들이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 법률에 의해 근로자는 고용상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위험한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기준은 농업, 어업, 광업을 포함하여 모든 산업 부문에 적용된다.

당국은 당해 연도 중에 기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자를 즉시 사법 처리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위반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혹은 1 억 원(95,24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적 그리고사후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9 월을 기준으로 전국 47 개 지사에 350 명의 산업안전보건담당 근로감독관과 1,091 명의 일반 근로감독관이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는 사고 예방을 목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당해 연도 중에 사회적 취약 계층인 외국인 임시직 연예홍행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6 월 당시 국내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유입된 약 532,270 명의 저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체류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절반 가량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된 상태였다. 고용허가제를 포함하여 일련의 규정들이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 대상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그 외의 모든 경우)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고용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특정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고 이직이 제한되지만 대부분이 노동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계약직·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노동인구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전자·자동차·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이직과 관련하여 다수의 제약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직장을 잃은 경우 3개월 내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 만약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내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당국은 해당자의 취업 허가를 취소하고 강제로 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농업 또는 건설 근로자 같은 계절 근로자들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주노동자는 전직을 원하는 경우 구인 기업의 명단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전직이 어렵다. 사업주는 구직 근로자의 명단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채용을 원하는 근로자를 접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주노동자는 최장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한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3개월 후에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규정 위반을 예방할 목적으로 처음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취업 전 교육을, 전직 근로자에게는 사업장 적응 교육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15개 언어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어 및 문화 강좌 프로그램, 쉼터, 무상 의료서비스를 운영하는 콜센터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37곳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무료 법률 자문, 상담, 통역, 자국어 건강검진,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개설 등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운영했다.

7월에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출국한 이후에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시민단체들은 개정된 규정이 이주노동자가 고용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했다.

10월에 발간된 엠네스티인터내셔널 보고서는 농업 부문에 고용된 이주노동자가 과도한 근로 시간, 저임금, 불법 하청, 열악한 생활조건에 직면해 있다고 적시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은 산업인 농업, 축산업, 어업 부문의 경우 법률이 근무시간, 공휴일, 수당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착취에 취약하다고 보고했다. 다른 시민단체들은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라는 형태로 사용자로부터 신체적 학대와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에 의하면 주거비나 식대를 임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고용계약 변경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여성 외국인근로자들은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분기별로 사망자수와 질병자수에 관한 산업재해 현황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6월 현재 정부는 169,559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조사를 실시했다. 보고된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91,824 건이었으며 사망자는 1,929 명이었다. 정부는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업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